

www.peaceone.org

평화누리 통일누리

2020년 4월 Vol.193

현안 방위비분담금 13% 인상안 폐기해야!

소성리 사드 기지 감시 활동

인터뷰 효순미션 평화공원 조성

비핵평화화 해비확산조약과 핵무기금지조약 관계

핵무기금지조약 발효를 위한 Cities Appeal





[방위비분담금]

- 1 방위비 분담 명목으로 기어이 40~50억 달러를 뜯어내려는 트럼프 대통령 규탄!
방위비분담금 13% 인상안을 폐기하고 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를 선언하라!



[비핵평화]

- 7 핵무기금지조약과 핵비확산조약, 그 상호관계 + NPT&TPNW 연구모임
- 10 세계 평화운동 동향 : 핵무기금지조약에 대한 '도시들의 호소(Cities Appeal)' 운동
+ NPT&TPNW 연구모임



[특집_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14 허세욱 선생님과 효순이 미선이의 해후를 바라며 + 황윤미
- 15 사고현장에 떨어진 운동화 한 짝, 그 속에서 피어난 작은 촛불, 올해 효순미선 평화공원이 완성됩니다. + 박석분, 김은주



[미군기지]

- 19 대구경북지역 기지감시 대응 활동 - 성주 소성리 사드 기지를 중심으로 + 김영재



[소식]

- 23 광주/목포/보령/부천/부산/서울/인천/순천/논산계룡/대전충청

[회비와 후원금]

- 31 감사합니다.

방위비 분담 명목으로 기어이 40~50억 달러를 뜯어내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 행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13% 인상안을 폐기하고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를 선언하라!

한미 실무협상팀이 합의한 방위비분담금 13% 인상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최대로 인상된 합의안 마저 걷어차고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을 대거 무급휴직시키는 횡포와 불법을 자행한 것은 기어이 40~50억 달러의 방위비분담금을 받아내려는 심보다. 우리는 자신의 업적 과시와 이를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온갖 불법과 강압을 일삼고 한국인 노동자들을 끝내 벼랑으로 내몬 트럼프 대통령과 미 행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명분도 근거도 없다! 방위비분담금 13% 인상안을 폐기하라.

한미 실무협상팀이 잠정 합의한 13% 인상안은 아무런 근거도 명분도 없다는 점에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물가와 연동시켰으며, 문재인 정부는 작년에 국방예산 증가와 연동시켰다는 점에서 이번 13%의 인상은 전례를 훨씬 뛰어넘는 막무가내식 인상안이 아닐 수 없다.

이번 13%(1351억 원)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은 역대 최악의 협상으로 평가받는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따른 인상률 8.2%(787억 원)와 비교해서도 1.7배로 거의 2배에 달한다. 또한 이는 남북관계가 최악이었던 이명박 정권의 2.5%(185억 원) 인상이나 박근혜 정권의 5.8%(505억 원) 인상과 비교하더라도 인상률로는 2.2~5.2배, 인상액으로는 2.7~7.3배나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에 굴복해 15~20%의 추가 인상안을 제시한다면 인상액은 1,558~2,078억 원으로 더욱 커지게 된다.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13~20%의 인상이 국가재정에 주는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연간 상승률을 9차 특별협정 경우와 비슷한 4%로 잡는다면 5년 차의 마지막 해인 2024년 방위비분담금은 1조 3,734억 원이 된다. 2019년 1조 389억 원보다 무려 32%(3,345억 원)나 오르게 된다. 5년간 한국이 미국에 지불할 방위비분담금

총액은 6조 3,588억 원으로 이 금액은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분담금 40~50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치다. 만약 20%를 인상해 주고 앞으로 5년간 물가 인상율만큼 올려 줄 경우 5년 후에는 1조 3,600억 원이, 작년 사례처럼 국방예산 증가율만큼 올려줄 경우 5년 후에는 1조 6,234억 원이나 된다. 각각 한국이 미국에 지불할 방위비분담금 총액은 6조 5,138억 원과 7조 1,797억 원으로 이 금액은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분담금 40~50억 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현재 약 2조 원의 방위비분담금이 미집행된 채 남아있다는 점에서도 13~20% 인상안은 납득할 수 없다.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미집행현금만 3,437억 원(2018년 12월 말 현재)이다. 또 주한미군에게 아직 인도되지 않은 군사건설 분야의 미집행 현물지원분은 9,079억 원(2019년 12월 말 현재)이다. 군사건설비 항목에서만 미집행금액이 1조 2,516억 원이나 되는 것이다. 이외에 불용액(2009~2019) 1,250억 원, 협정액보다 낮게 예산을 편성해 생긴 감액 누계(2011~2018) 5,570억 원, 군수지원 분야에서 미집행된 현물지원분 562억 원(2018년 12월 말 현재)을 더하면 미집행 방위비분담금은 총 1조 9,898억 원에 달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개최된 협상에서 한국은 방위비분담 삭감을 제안하였고 이에 반발해 미국 협상팀이 퇴장했다고 한다. 이는 한국 정부도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13%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아무런 근거도 명분도 없이 그저 트럼프의 탐욕과 미 행정부의 압력에 굴복해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올려주는, 국민 뜻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미국 무기 강매, 역외작전 비용, 환경오염 치유 비용 전가 등을 통해 40~50억 달러 요구를 기어이 관철하려는 트럼프 정부를 규탄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13% 인상 합의안을 거부하면서 “한국이 더 기여할 수 있고 더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어이 40~50억 달러를 받아내겠다는 심산이다.

한국 국방부는 미 록히드마틴사와 수 억 달러에 달하는 다연장로켓(GMLRS) 생산계약을 맺었다. 또한 6억 7천 500만 달러의 F-35 전투기 장비와 서비스도 들여 오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분담금 50억 달러의 요구를 낮추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9.25)에서 향후 3년간(2020~2022년) 12조 원이 넘는 미국무기의 구매를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도 조인스 스타스, SM-3 함대공 미사일, 공군 전자전기, 아파치 공격헬기, 글로벌호크, P-8 초계기, F-35 20대 추가구매 등 미국무기 도입이 줄 서 있다. 2020년 국방예산의 미국무기 도입비는 무려 33억 달러(4조 원)에 달한다.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비용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는 현 한미소파 체제하에서 미국과의 오염정화 비용 분담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한국 정부가 이를 부담할 의사를 밝혔다. 이 또한 미 행정부의 방위비분담 대폭 증액 요구를 완화시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정화 비용 부담 의사를 밝힌 것이나 그 기대가 충족되는 것 없이 약 12억 달러(1조 5천억 원) 이상의 비용만 부담하게 되었다.

한편 한국은 올 1월에 호르무즈해협에 전투병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미국의 이른바 항행의 자유 작전에 대한 한국의 병력 파견이나 비용 분담을 바라는 미국의 강요에 따른 것이었다. 지난 2월 27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우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금을 제공할 것이다”는 정경두 장관의 발언은 호르무즈해협이나 남중국해에서의 미국의 항행의 자유작전에 한국이 비용 부담을 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 비용을 정확히 산정할 수는 없으나 최소 수백만 달러를 상회할 것이라고 쉽게 어림짐작할 수 있다.

이렇듯 방위비분담금만으로 한정하더라도, 물론 최종 인상액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로부터 3년 안에 40~50억 달러의 방위비분담금을 채겨갈 수 있다. 여기에 미국 무기 도입, 환경정화, 호르무즈 파병 비용 등을 더하면 1~2년 안에 너끈히 40~50억 달러를 뜯어갈 수 있다. 가히 갈취가 아니고 무엇인가?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무급휴직을 즉각 철회하라!

주한미군은 자체 인사규정에 따른 ‘자금부족 등으로 인한 일시해고’ 조항을 근거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4,000여 명에 대해 무급휴직을 단행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자금 부족’ 주장은 핑계에 불과하다.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노동자의 연간 인건비는 약 5,600억 원이다. 그런데 주한미군의 ‘2018년 방위비분담금 연례집행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미집행현금(설계비 명목으로 받아 안 쓰고 축적해 놓은 현금과 2009년 이전에 군사건설비에서 몰래 빼돌린 현금으로 우리 국고로 회수해야 할 돈)만 2018년 12월 말 현재 3,437억 원에 달한다. 3,437억 원이면 무급휴직 노동자 4,000여 명의 연간 인건비 2604억 원을 충당하고도 남는다. 2020년도의 주한미군의 운영유지비(인건비 제외)가 22억 달러(2조 6700억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점에서도 ‘자금 부족’을 이유로 한 무급휴직은 근거가 없다. 주한미군은 운영유지비를 전용해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을 피해 간 적도 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이 불법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미소파 17조 3항은 군사상 필요가 아닌 한 한국 노동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무급휴직은 군사상 필요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마땅히 한국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한다. 한국 근로기준법 23조 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휴직을 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휴직을 시키면서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이번 무급휴직에는 한국노무단(KSC) 소속 1500여 명의 노동자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을 무급휴직시킨 것은 한국노무단의 임금을 미국이 지급하도록 규정한 한국노무단지위협정의 위반이다. 또한 한미소파 17조 4항은 쟁의가 있으면 먼저 고용노동부에 회부하고 여기서 합의되지 않으면 합동위원회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런 절차마저 일방적으로 거부하였다.

아울러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은 “주한미군 사령부는 …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와 안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그러한 고용이 미합중국군대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는 경우가 아닌 한 고용을 종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이행약정을 위반한 것이다.

한편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들은 전용식당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국내 동종업종 노동자들의 반값 밖에 안 되는 저임금을 받으며 감원, 정리해고 등 만성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2017~2019년에만도 400~500명이 부당하게

개정되어야 할 한미소파 독소조항

한국인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가장 심각한 독소조항은 주한미군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노조 해산권과 노동자 해고 권한(한미소파 17조 4항(가)(4))이다. 17조 4항(가)(4)는 “쟁의에 대한 합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또는 해결 절차의 진행 중 정상적인 업무 요건을 방해하는 행동”에 대해 노동조합 승인 철회와 고용원 해고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고 있다.

주한미군의 ‘군사상 필요’를 명분으로 한국 노동법령 적용을 제한(17조 3항)하거나 ‘고용주(주한미군)에게 노동조합 설립 승인권을 부여(합의의사록 17조 5항)하고, 합동위원회의 분쟁 해결 전 쟁의를 금지하면서도 합동위원회 협의 종료 시점을 명시하지 않아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는 양해사항 17조 4항(가)(5), 합동위원회가 합중국 군대의 군사작전을 심히 방해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단체행동권을 배제하도록 한 한미소파 17조 4항(나) 등도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전면 제약하거나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헌법(33조 1항), 노동조합법, 노동관계조정법(5조) 등을 전면 위배하는 것이자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들의 법적 권리와 지위를 박탈하고 전근대적인 노사관계로 내모는 악법으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해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노동자들은 한미 소파의 독소조항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제약당하며 주한미군의 불법적, 임의적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한미 당국은 한국 헌법과 노동법을 위배하고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사문화시키고 있는 한미소파 17조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 정부와 국회는 미국의 횡포로부터 한국인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조속히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상의 조치들은 무기휴직을 악용하는 미국과 미군의 횡포를 막고 무급휴직 장기화에 대비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미국의 일상화된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과 집행을 막아야 한다.

미국이 2021년도에 4900만 달러(580억 원)의 방위비분담금을 성주 사드 부지 건설공사에 전용할 계획임이 미 육군 2021회계연도 군사건설 예산사업설명서에 밝혀져 있다. 그러나 방위비분담금을 사드 부지건설에 쓰는 것은 미국이 시설과 구역을 제외하고 모든 주한미군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한미소파 위배다. 또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아직 체결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방위비분담금을 사드부지 건설 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관련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2016.3.4.)을 근거로 한국이 사드부지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약정이 사실이라고 해도 국가와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사드 부지 및 기반시설 제공 등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으로 체결해야 하며,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기관 간 약정'으로 이를 대체할 수 없다. 주한미군은 2018년에도 이미 5만 달러의 방위비분담금(미집행 현금)을 성주 사드부지의 설계비용으로 전용한 바 있다. 그러나 9차(2014~2018년)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어디에도 사드부지에 방위비분담금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이 없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축적한, 마땅히 우리 국고로 회수되어야 할 미집행현금을 설계비로 썼다는 점에서 불법성은 가중된다.

이런 방위비분담금의 불법적 집행은 사드부지 건설공사에 한정되지 않는다. 방위비분담금의 평택미군기지 건설비로의 전용은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과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및 국가재정법 위반이다. 방위비분담금이 평택미군기지 건설에 불법 전용된 돈은 무려 2.4조 원에 달한다.


방위비분담금의 불법 전용과 집행을 막고 재정주권을 지키며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는 것은 한국 정부의 마땅한 의무이자 트럼프 행정부의 최소한의 도리다.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과 협정 폐기로 주권침해를 막고 호혜평등한 한미관계를 열자!

트럼프 대통령의 끝없는 탐욕과 미 국무부와 국방부의 전횡과 강압에 의해 한국은 방위비분담금은 방위비분담금대로 대폭 올려주고 미국무기 추가 도입 비용, 호르무즈해협 전투병력 파견, 항행의 자유작전 참여 비용, 주한미군기지 오염정화 비용 등의 부담은 그것대로 지게 되었으며,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은 끝내 무급휴직으로 내몰렸다. 그러나 문제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13% 인상안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거절되었기 때문에 이제 20~30%까지 올려주어야 할지도 모른다. 현재 한미 간 견해차가 수백억 원 수준이 아닌 최소 몇천억 원대라고 하지 않는가!(한겨레, 2020.4.4.) 이 모든 것은 한국 정부가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기간 내내 수세적인 자세로 일관한 결과다.

그런데도 지금 한국 정부와 평택시는 수십(한국 비용 계산), 수백억 원(미국 현지 비용 계산)의 우리 예산을 들여 주한미군과 군무원, 가족 등 미국 국적자들에 대해 코로나 19 전수 검사를 해줄 예정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19 장비 요구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떤 특혜를 주게 될지 알 수 없다.

코로나 19로 올해 우리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당장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수백만의 생활보호대상자 등이 파산과 실업 위기에 몰려 있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와 한국인을 상대로 한 갈취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고 문재인 정부는 한국경제와 한국인을 위해 사용해야 할 우리 세금을 미국과 미국인들을 위해 아낌없이 쓰려고 한다. 안보와 계속적인 미군 주둔을 명분으로.

그러나 미군 주둔은 미국 자신의 안보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이 그 부담을 질 이유가 전혀 없다. 한국은 세계 6~7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로서 얼마든지 독자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이 땅에 주둔하기 원한다면 기지사용료 등 응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미국에 방위비분담금을 지불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폐지는 너무나도 정당하다. 이 길만이 트럼프의 무도한 탐욕에서 우리의 주권과 재정을 지키는 길이다. 나아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가동, 남북 철도 연결 등 남북관계 개선에도 더 이상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주동적으로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야만 트럼프 행정부가 오히려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압박과 전횡을 거두어 들일 것이다.(2020년 4월 13일) 

핵무기금지조약과 핵비확산조약, 그 상호관계

번역 : NPT & TPNW 연구모임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핵보유국을 중심으로 핵무기금지조약에 대한 여러가지 반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주된 주장은 핵무기금지조약이 핵비확산조약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며, 핵무기금지조약이 오히려 핵비확산조약의 이행을 가로막거나 그 목적에 반한다는 것이다. 이 글은 핵무기금지조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 발의하고 사회진보연대 등 30여 개 단체가 공동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촉구 국제서명운동을 돕기 위해 번역한 글이다. 영어 원문은 'The TPNW and the NPT'(The Reaching Critical Will, 『2019 NPT BRIEFING BOOK』 19~21쪽)이다.

핵무기금지조약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핵비확산조약과 핵무기금지조약 사이에 잘못된 긴장을 만들어내려고 하지만, 핵무기금지조약은 법적·실제적 의미에서 핵비확산조약과 상호보완적이다. 핵무기금지조약 협상은 모든 핵비확산조약 당사국들이 2010년 모든 핵무기 사용의 “재앙적 인도주의적 결과”에서 표명한 깊은 우려에 대한 논리적이며 필요한 대응이었다.

핵비확산조약은 핵군축 시한과 계획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핵보유국의 군축 의무만 규정하고 있다. 다른 무기 체계에서 보듯, 금지는 제거를 촉진한다. 핵무기 금지는 핵무기를 제거하는 중대한 첫걸음이다. 핵비확산조약 제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핵군축 협상을 진전시키는 것은 모든 국가의 책임이다. 핵무기의 절대적 금지를 향한 모든 조치는 핵비확산조약과 완전히 일치하고, 제6조에서 언급된 “효과적 조치”에 해당한다.

핵군축 진전의 결여는 일부 국가들의 핵무기 현대화, 그리고 핵무기가 안보적 가치가 있다는 주장과 더불어서 핵무기 확산을 막는 것과 핵무기 없는 세계를 달성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핵무기 금지는 핵비확산조약이 직면한 모든 난제를 당장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나 핵무기금지조약은 핵비확산체제가 직면한 많은 우려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핵비확산조약은 핵무기를 금지해야 할 논리와 의무를 모두 제시한다. 핵비확산조약은 핵확산 방지 및 군축 달성을 위한 동기로서 핵무기 사용이 가져올 재앙적 결과를 강조한다. 핵비확산

〈편집자 주〉 ‘NPT & TPNW 연구모임’은 2020년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 참가와 핵무기금지조약(TPNW) 가입 서명운동을 위해 구성된 프로젝트 팀이다. 평통사 상근자들과 청년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핵무기금지조약(TPNW :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핵무기가 다시는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핵무기의 완전 폐기라는 공통의 인식에 기반하여 핵무기의 사용과 사용 위협을 불법화한 최초의 국제조약으로 2017년 7월, 유엔에서 채택되었다.

핵비확산조약 (NPT :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핵비확산 체제의 근간이 되는 국제조약으로 1968년 7월 56개국에 의해 체결, 1970년 3월 발효되었다. NPT는 핵보유국(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에는 핵무기 이전금지(1조)와 핵군축(6조)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핵비보유국에게는 핵무기 제조 및 획득 금지(2조)와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3조)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같은 차별적인 의무 부과 뿐만 아니라 핵보유국의 군축 의무가 강제 조항이 아니며 IAEA 사찰 의무도 없다는 점에서 NPT는 '불평등 조약'이라는 근본적 한계를 가진다.

핵비확산조약 제6조: 조약당사국은 조속한 일자 내의 핵무기 경쟁 중지 및 핵군비축소를 위한 효과적 조치에 관한 교섭과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적 통제하의 일반적 및 완전한 군축에 관한 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성실히 추구하기로 약속한다.

조약은 특히 군비 경쟁과 핵무기 생산을 끝내고, 신의 성실한 교섭을 통해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를 달성하고자 한다. 핵무기를 금지하는 것은 핵무기 사용의 재앙적 결과를 주된 동기로 삼고 있는 바, 마찬가지로 핵무기의 생산과 보유를 끝내고자 하는 것이다.

핵무기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핵비확산조약과 완전히 일치하며, 핵비확산조약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 무엇보다도 핵무기금지조약은 핵무기를 (불법으로) 낙인 찍을 것이고, 이는 핵무기금지조약 당사국 이외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낙인을 찍는 것은 핵무기 보유와 재원에 대한 새로운 규범을 만들면서 법적, 정치적 지형을 변화시킬 것이다. 또한 핵무기금지조약은 핵무기를 '억제력'이나 '안보'의 도구가 아니라 테러, 불안정, 불안의 무기로 이해하는 핵무기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뒷받침할 것이다. 핵무기를 불법으로 낙인을 찍는 것은 핵무기가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원칙과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며, 국제 사회에서 명망 있는 국가로 보이고 싶어 하는 국가들에게 핵무기를 점점 더 매력적이지 않게 만들 것이다.


동시에 핵무기금지조약은 또한 핵군축 조건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핵무기금지조약은 군축과 추가적인 핵무기 개발 및 현대화를 종식하기 위한 담론의 장과 맥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핵무기금지조약은 핵무기 생산으로부터 재정적 투자 철회를 위한 경제적 자극을 줄 것이고, 군비경쟁 종식과 핵군축의 실제 과정을 시작하기 위한 정치적·법적·사회적 장려책을 제공할 것이다.

핵무기금지조약은 또한 '과정'에 대한 매우 중요한 점을 제기한다. 핵비확산조약의 문제는 조약당사

국들, 특히 핵보유당사국들이 공약은 하지만 이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다른 비핵보유국들은 절충을 하여 합의에 도달한다. 즉, 비핵보유국들은 절충함으로써 절충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더 못한 합의를 받아들이고, 그 대가로 다른 약속을 제안한다. 그러나 때때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러한 양보를 강요한 국가들은 그 합의에서 벗어나거나 합의를 재해석해 왔다. 핵비확산조약 제6조, 1995년 중동에 대한 결의, 2000년 핵군축 13개의 실질 조치의 대부분, 2010년 행동계획 중 제5조 및 제21조 모두가 그 사례이다.

해결책은 핵보유국들의 공약 이행을 기다리는 것을 중단하고, 그들이 합의 달성을 좌우하는 것을 막는 데에 있다. 특정 국가들이 양보를 강요하고, 그들의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식의 패턴이 있을 때, 다른 국가들은 이러한 패턴이 집단 안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

안보에 대한 국가중심적 접근법에서 인도주의적 접근법으로의 변화는 훌륭한 시작이었다. 인도주의적 영향에 대한 논쟁은 핵무기가 위험하고 파괴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입증했다. 또한 이 논쟁은 군축이 모두의 책임이라는 관점을 강조했다. 이 변화무쌍하고 불안한 세상에서, 장애물이 스스로 움직이길 기다리지 않고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과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길이 있다. 핵비확산조약은 핵무기 폐기라는 가장 근본적인 목표의 달성을 (핵보유국들이) 조건이 됐다고 느낄 때까지의 무기한 보유형태로 좌초시킬 수 없다. 모든 국가는 핵비확산조약의 정신 및 문자, 재검토회의 결과문서에 반영되어 있듯이 그들의 약속을 이행할 즉각적인 의무가 있다. 핵무기 금지는 그 이행 과정의 일부이다. 핵무기금지조약은 핵비확산조약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만약 핵비확산조약이 붕괴된다면, 그것은 핵보유국이 군축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지난 반세기 동안 한 선택들 때문일 것이다. 핵무기금지조약은 핵무기 없는 세계를 달성하고 유지하며, 핵 군비경쟁의 종식과 모든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를 촉진하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핵비확산조약의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이다.

핵비확산조약 재검토회의 의장은 2018년에 핵무기금지조약의 채택과 다수의 핵비확산조약 당사국이 핵무기금지조약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핵무기 금지를 만들어냄으로써 핵비확산조약의 제6조에 따른 효과적인 조치를 대표한다고 주장한 요약서를 발표했다. 요약서는 핵무기금지조약은 핵비확산조약을 보완하며 기존의 군축과 핵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강조했다. 

핵무기금지조약(TPNW) 가입촉구 서명운동 진행하는 평통사 회원들



세계 평화운동 동향 :

핵무기금지조약에 대한 ‘도시들의 호소(Cities Appeal)’ 운동

NPT&TPNW 연구모임

국제핵무기반대운동(ICAN)은 핵무기금지조약(TPNW)에 대한 각국 정부의 서명과 비준을 이끌어내기 위한 운동의 하나로 핵무기금지조약에 대한 ‘도시들의 호소(Cities Appeal)’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도시들의 호소’는 크고 작은 도시(지방자치단체)들이 핵무기금지조약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중앙정부가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도록 촉구할 것을 약속하는 국제캠페인이다.

2020년 4월 현재 핵무기금지조약을 지지하는 도시는 300개(워싱턴, 로스앤젤레스, 캔버라, 토론토, 파리, 베를린, 히로시마, 나가사키, 제네바, 바르셀로나 등)에 달한다. 핵전쟁 위험이 가장 높은 한반도에서, 그것도 한반도 비핵화를 촉

구하는 한국정부가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한미동맹과 미국의 핵우산에 얽매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 정부의 핵무기금지조약 가입을 건인하기 위한 풀뿌리 대중운동이 필요하다. 핵무기금지조약 서명운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도시들의 호소’를 위한 호소문(모델) 및 지지체나 지방의회에 보내는 요청서한(모델)을 번역, 소개한다. 심신아 회원이 번역하고 NPT&TPNW 연구모임에서 내용을 다듬었다.

ICAN Cities Appeal 주요도시 (16 개국 300여개 도시 : 2020. 4. 25일 현재)

- 호주 : 캔버라, 멜버른, 시드니 등
- 캐나다 : 토론토, 밴쿠버 등
- 프랑스 : 파리 등
- 독일 : 베를린, 뮌헨, 포츠담 등
- 인도 : 칸 누르 등
- 일본 : 히로시마, 나가사키 등
- 노르웨이 : 오슬로
- 스페인 : 바르셀로나 등
- 스위스 : 제네바, 취리히 등
- 영국 : 맨체스터, 옥스퍼드 등
- 미국 : 캘리포니아, 버클리, 브루클린, 로스앤젤레스, 필라델피아, 워싱턴 등

‘도시들의 호소’ 취지

핵무기는 모든 곳의 사람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위협을 가한다. 이것이 2017년 7월 7일, 122개 국가가 유엔에서 핵무기금지조약 채택을 의결한 이유다. 각국의 정부는 핵무기의 사용과 생산, 비축을 불법화하고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의 토대를 놓는 핵무기금지조약에 서명하고, 비준

하기를 요청받고 있다. 각국의 도시들은 국제핵무기반대운동의 ‘도시들의 호소’를 채택함으로써 핵무기금지조약에 대한 지지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

왜 도시인가 ?

핵무기는 대다수의 경우, 공격의 주요 목표가 되는 도시에 특정한 위협을 가한다. 핵무기는 목표물에 광범위한 피해를 가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것은 경쟁국가의 핵심시설에 대한 핵 위협의 본질이며, 이는 핵보유국 9개국들과 핵무기 사용을 지지하는 수십 개국의 국가들에 의해 합법적인 방위전략으로 홍보되는 핵억제 이론과 관행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 나라들은 핵전쟁 발발 직전까지 다다랐던 일촉즉발의 상황과 오판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며 그 기반부터 무너져온 이 전략에 동의하면서 시민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특별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핵무기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혀야 하는 의무가 도시에 있는 것이다.

도시의 참여는 국민의 의지에 부응해야 할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도시들이 정부에게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할 것을 촉구할 때, 시민들이 대량살상무기를 반대하고 있고, 정부가 이러한 의견을 일관되게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상기된다. ‘도시들의 호소’에 대한 지지는 이러한 목소리를 증폭시킬 것이며, 또 정부가 핵무기와 어떤 형태로든 연루되는 것을 피하도록 하고 이웃국가들이 그 선례를 따르도록 만든다.

‘도시들의 호소’를 지지하는 방법

‘도시들의 호소’는 핵무기금지조약에 서명·비준하지 않은 국가의 지자체를 위한 것이다. 지자체 장이 아래의 ‘호소’에 대한 지지 입장을 국제핵무기반대운동(ICAN) 메일 info@icanw.org로 보내면 된다. 이외 국제핵무기반대운동이 제안하는 지자체 장이 할 수 있는 추가적 행동은 아래와 같다.

1. 외교부 장관 혹은 다른 정부 부처에 ‘도시들의 호소’를 지지한다는 것을 알리는 편지 보내기
2. 핵무기금지조약 서명과 비준을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대 언론 발표
3. 핵무기의 위협과 이를 제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대중 전시
4.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의 경우, 핵무기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철회


국제핵무기반대운동(ICAN)에서 추진하는 ‘도시들의 호소’ 운동의 호소문 전문을 번역한 것은 아래와 같다. (각 도시의 시장들은 아래 호소문에 서명하여 ICAN에 보낸다.)

“우리 도시는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가 지역사회에 제기하는 심각한 위협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민들이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에 살 권리가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 어떤 핵무기의 사용이라도 그것이 고의적이든 우발적이든 간에 그것은 인류와 환경에 재앙적이고,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비극을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2017년 UN에서의 핵무기금지조약 채택을 열렬히 환영하고, 우리 정부가 핵무기금지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합니다.”

“Our city/town is deeply concerned about the grave threat that nuclear weapons pose to communities throughout the world. We firmly believe that our residents have the right to live in a world free from this threat. Any use of nuclear weapons, whether deliberate or accidental, would have catastrophic, far-reaching and long-lasting consequences for people and the environment. Therefore, we support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and call on our governments to sign and ratify it.”

.....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1. 핵무기금지조약 가입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하기, 가족과 지인들에게 서명운동 안내하기, SNS 홍보 및 캠페인
 - 한국에서의 핵무기금지조약서명운동은 2019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과 한국원폭피해자협회가 발기하고, 30여개 단체가 공동추진단체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2. 아래의 편지 모델을 참조로 시 의회나 군수, 시장, 도지사 등에게 ‘도시들의 호소’를 지지할 것을 촉구하는 편지쓰기
 - 아래의 편지 모델은 국제핵무기반대운동(ICAN)의 편지 모델을 참고로 평통사와 한국원폭피해자협회가 발기한 ‘핵무기금지조약 국제서명운동’ 제안문 내용을 그대로 살려 작성하였다. 

시장님께 드리는 편지(모델)

발 신 : XX를 대표하여 000

수 신 : 시장 또는 담당 공무원의 이름

제 목 : 유엔 핵무기금지조약 지지 표명 요청

핵무기금지조약(TPNW)에 대한 지지와 정부에 핵무기금지조약에 대한 서명과 비준을 촉구하는 '도시들의 호소(Cities Appeal)'운동에 대한 시장님의 지지를 요청 드립니다.

도시는 핵무기의 주요 표적이고 지자체는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핵무기 사용과 사용 위험을 불법화한 핵무기금지조약을 지지해야 할 특별한 책임이 있습니다.

지자체는 주민과 지역사회운동과 아주 밀접한 연계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와 시민사회의 국제적 연대는 핵무기 제거를 향한 결정적인 발걸음을 내딛도록 판도를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장님이 '도시들의 호소' 운동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핵무기를 불법으로 낙인찍고, 금지하고 제거하는 국제적인 운동에 동참하기를 요청 드립니다.

1945년 8월 6일과 9일,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무기를 투하해 70만 명의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살상(24만 명 사망)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폭자 중 한국인이 7만~10만 명(4만 명 사망)이나 됩니다. 살아남은 한국인 피폭자 다수는 고국으로 돌아왔으나 가난과 냉대, 국가적 방치 속에서 원폭 후유증에 시달리다 죽어갔습니다. 후손들도 원폭 피해의 유전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죽거나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제 식민지배와 수탈의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인류와 지구의 절멸을 가져올 수 있는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는 것은 인류 공통의 염원입니다. 지금도 미국, 러시아 등 핵무기 강대국들은 인류를 수십 번도 더 절멸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1만 2천 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는 세계에서 핵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발발하면 우리 민족과 국가는 공멸합니다.

2017년 7월 7일, 유엔총회에서 사상 최초로 핵무기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한 핵무기금지조약이 채택되었습니다. 핵무기금지조약은 핵무기를 불법으로 낙인찍는 효과를 통해 수십 년간의 핵군축 교착상태를 끝내고 핵무기의 폐기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핵전쟁 위험성이 가장 높은 한반도에서, 그것도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는 한국 정부가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모순입니다. 정부는 즉각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해 원폭 피해자의 한을 풀어 주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 및 핵 없는 세상을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핵무기금지조약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중앙 정부에게 핵무기금지조약 서명과 비준을 촉구해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허세욱 선생님과 효순이 미선이의 해후를 바라며

황윤미 서울평통사 대표



허세욱 선생님과 평통사의 인연은 2002년, 효순미 미선이 두 여중생의 억울한 죽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허세욱 선생님은 두 여중생의 죽음을 널리 알려야겠다며 유인물을 받으러 평통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던 것입니다. 택시 운전사였던 그는 손님들께 유인물을 한 장 한 장 나눠주고, 남은 유인물은 봉천동 산동네,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면서 집집마다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2004년, 그는 서울 평통사 노동분회원이 되었습니다.

모임을 함께하며 겪은 허세욱 선생님은 부끄러움도 많고 말수도 적은 분이었습니다. 이런 분이 택시 손님에게 유인물을 나눠드렸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모임이나 뒤풀이 때 노동의 현실이나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는 열변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좋아하던 막걸리라도 한 잔 걸쳤을 때는 두말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는 효순이 미선이를 죽인 미군들에게 고향과 땅까지 빼앗기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황새울 벌판을 군인들이 미군기지로 강제집행 하던 날, 그는 벌판에 내려앉은 군 헬기를 향해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라고 쓰인 노란 깃발을 흔들며 내달렸습니다. 결국 미군기지로 황새울을 빼앗겼고, 쉬 가라앉지 않는 울분과 분노에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평통사 기자회견이나 집회가 있어 미리 연락을 드리면 일부러 그 장소 근처로 가는 손님을 태워서 실천에 참여하곤 했습니다. 불쑥, 커피캔이나 음료수 두세 개를 사들고 사무실에 나타나 전해주고 가기도 했습니다. 택시 손님이 근처에 내렸다고 하면서, 허세욱 선생님의 기일을 맞아 마석 모란공원을 찾을 때, 진보진영의 현실이 부끄러워 마음이 너무 무거울 때도 있었고, 작년엔 목련이 흐드러졌는데 올해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며 봄소풍 가듯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벌써 13년, 이 세상의 일일랑 남은 사람들에게 맡기시고, 저 세상에서 효순이 미선이와 만나셨기를 바랍니다. 올해, 효순미선 평화공원 완공식 때는 두 아이들과 함께 그곳에 들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허세욱 선생님, 편히 쉬세요.

[편집자 주] 고 허세욱 열사는 1953년 경기 안성 출생. 91년 한독운수 입사, 94년 봉천동 철거투쟁에 참여하며 운동을 시작. 이후 노조, 정당, 시민단체, 평통사로 의식과 활동의 영역을 확장함. 2007년 4월 1일, 오후 3시 55분. "미국적 한미 FTA 폐기 하라" 외치며 협상장인 서울 하얏트 호텔 앞에서 분신. 4월 15일 운명.



사고현장에 떨어진 운동화 한 짝, 그 속에서 피어난 작은 촛불 올해 효순미선 평화공원이 완성됩니다.

만난 이: 박석분 효순미선평화공원조성위원회 집행위원장, 평통사 조직위원

글쓴 이: 김은주 효순미선평화공원조성위원회 간사, 평통사 청년 상근활동가

Q. 효순미선 평화공원의 조성 과정과 의미는 무엇?

무엇보다 평화공원은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압사당한 효순 미선이의 넋을 기리는 곳입니다. 사고현장 부근에 공원을 조성한 것은 진상규명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기도 하고요.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한미관계로 바꾸어 주권을 실현하며 자주와 평화를 꽃피워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자는 다짐을 담아내는 공간입니다.

효순 미선 사건 후 그 해 9월에 미 2사단이 사고현장에 추모비를 세웠어요. 그런데 미군들은 추모비에 두 여중생이 “불의의 사고”로 숨졌다고 적어놓았어요. 기만적이고 책임을 회피하는 이 문구에 화가 난 추모객들은 추모비에 있는 “미2사단” 글귀를 무언가로 쪼아서 알아볼 수 없게 미군추모비를 훼손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추모객들의 마음을 받아 2008년 6주기 추

모제 때, 평통사 고영대 공동대표가 우리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시민추모비를 건립하자고 제안한 거죠. 그래서 10주기가 되는 2012년, 시민들의 정성어린 모금으로 시민추모비를 제작했지요. 김운성 작가가 제작에 나서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민추모비를 미군추모비 자리에 세우기 위해 미군들에게 자신들의 추모비는 2사단 영내로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래야 늘 보면서 경각심을 갖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미군들은 유족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꼼짝도 하지 않았죠. 그래서 부지매입에 나선 겁니다. 땅을 사고, 미군추모비 부지까지 증여받게 된 2017년까지 우리 시민추모비는 추모제 때마다 트럭에 실려 다녔죠. 사고현장으로, 광화문과 대한문으로. 경찰이 트럭 째 탈취하는 일까지 겪었어요. 2019년, 사건 후 17년 만에 미군 추모비를 해체하여 옮기고 평화공원 착공식을 하게 되었고, 올해 드디어 완공하는 겁니다.

Q. 효순미션 사건에서 평통사는 어떤 역할?

평통사의 초동대응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로 묻혔을 겁니다. 수많은 미군 범죄 중 하나로 치부되었겠죠. 실제로 미군들은 그렇게 했어요. 사고를 내고서도 한 시간이나 방치했으니까요. 지나던 시민이 보고 신고하고서야 한국 경찰이 현장에 왔는데 미군들은 운전병에 대한 경찰의 접근을 막았을 정도니까요. TV한줄뉴스와 제보로 이 사건을

접한 평통사는 사고현장으로 달려가 현장 사진들을 확보하는 등 진상조사에 나서고, 월드컵 응원전을 벌이는 광장으로 나가 피켓을 들고 이 사실을 알려냈습니다. 미군장갑차두여 중생압사사건범국민대책위원회(여중생범대위) 결성에 앞장서 진상규명 활동과 재판권 이양 촉구 투쟁의 선봉이 되고 여중생 촛불을 범국민적인 투쟁으로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지요. 무죄판결 후에도 이에 굴하지 않고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분석하여 무죄판결을 뒤엎을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시민추모비 제작과 평화공원 조성을 주도하여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상징적 사건인 여중생 투쟁의 현재적 의미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 평화공원은 운동화 모양인데?

설계를 맡은 이윤하 선생이 처음 설계한 모습은 지금 같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검토 과정에서 비용 등의 문제로 수정이 되었죠. 땅이 복잡하게 생겨 고민이 많았는데 신기하게도 사고현장에 떨어져 있던 아이들의 운동화 모양으로 설계가 변경되니 효순미션 평화공원 취지에도 맞고 의미도 있어서 만족스러운 설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Q. 작년 추모제에서는 기만적인 미군추모비를 해체하여 옮기고 그 자리에 시민추모비를 세웠었는데, 평화공원을 완공하게 된 심정은?

효순미션 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우리 국민들이 미국의 횡포에 맞서 주권 회복을 위해 나섰던 2002년 촛불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2002년 촛불에 참여했고 기억하는 시민들의 힘이 아니었다면 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공원 조성이 많은 분들의 지지와 성원 속에서 추진되어온 것은 주권을 회복하고 자주를 실현하려는 우리 국민들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편, 우리 손으로 추모비를 만들고 사고현장에 세우는, 어쩌면 단순한 이 일이 이렇게까지 오래 걸린 것 이야말로 한미관계의 현실을 보여주는 일이지요. 자주평화의 힘이 더 커져야 한다는 절실함을 느끼죠.



2019년 추모제에서 미군 추모비를 치우고 평화공원 첫삽두기를 진행하였다. (사진: 연합뉴스)

Q. 효순미션 평화공원은 어떤 모습인지?

공원의 전면, 중앙에 시민추모비를 세웁니다. 또 효순미션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작은 촛불이 범국민적인 촛불이 되어 '자주, 평화, 통일'의 횃불'로 승화되는 상징조형물을 세웁니다. 그리고 운동화 모양으로 벽을 세우고 그 벽 안쪽에 사건 경과를 기록합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역사적 사실들을 벽에 새겨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도 알 수 있게 하려고 해요. 또 역사상 처음으로 촛불이 켜지고, 시청광장을 메울 정도로 커져간 과정을 벽화로 그립니다. 굴욕적인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한미관계로 만들어야 한다는 자주의 촛불 벽화가 탄생할 예정입니다. 벽 한쪽에는 추모객들이 각자의 촛불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쇠북도 매달아둘 계획입니다. 시민추모비 건립부터 부지 매입, 평화공원 조성에 소중한 기금을 모아주신 분들의 이름도 정성스럽게 벽에 기록하려고 합니다.

Q. 평화공원 조성에 참여한 분들은?


평화공원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대중적으로 조성한다는 건 기본 입장이고 방침입니다. 대중적 방식이라는 것은 단지 모금뿐만 아니라 기술과 기능을 가진 분들의 재능 기부, 공원에 들어가는 건축자재 기부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죠. 이런 방식은 공사비 절감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공사는 익산 평통사 김대송 대표가 책임을 지고 진행합니다. 부산 손기중 사무국장, 부천 정용진 사무국장

이 도와서 함께 하고요. 이규 신임 중앙운영위원이 태양광 전기시설을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벽면을 구성하는 것도 작가홀씨인 이구영 작가를 비롯한 화가들이 맡습니다. 시민추모비는 제작자인 김운성 작가가 정비하고 자주평화 상징 조형물도 새로 제작합니다. 김운성 작가는 '촛불의 소리-식복' 제작에도 나섭니다.

Q. 마지막으로 평통사 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회원들의 관심과 애정, 모금 참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화공원 조성을 가능하게 해준 맨 앞자리에 우리 회원들이 계시죠. 중요한 계기마다 결정적인 조언을 해준 고영대 공동대표님, 추모제를 비롯한 행사 때마다 사무처 일꾼들의 수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작년 서울과 군산, 익산, 광주와 부산 회원들이 콘서트를 열어 약 2천여만 원의 기금을 만들어주신 일도 이 지면을 빌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원이 완공될 때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벽면 구성 등 여전히 공사에 드는 비용이 많이 부족합니다. 마지막 모금에 함께해주세요. 또 공사와 관련한 기술과 재능 기부도 부탁드립니다.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등한 한미관계와 동맹의 문제를 다시 한 번 깨닫고 호혜평등한 한미관계 수립을 위한 실천에 나서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이런 의미를 주변에 널리 알려 주세요. 평화공원 조성을 통해 효순미션 투쟁을 일궈온 평통사의 역할을 알려내고 새 평화세력을 모아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모금계좌 011201-04-185740 효순미션) 



대구경북지역 기지감시 대응 활동

- 성주 소성리 사드 기지를 중심으로

김영재 기획팀장

평통사는 이번 26차 운영위원총회에서 2020년 지역별특화사업으로 '기지감시와 대응활동'을 결의하였습니다. '기지감시와 대응활동'은 한미동맹의 공세적이고 도발적인 대북 작전수행을 임무로 하는 병력과 무기가 배치된 군사기지와 관련 훈련에 대해 지역 평통사가 주요 기지를 나누어 맡고 해당 기지에 대한 감시와 조사, 추적, 대응하는 활동으로 한미동맹의 기반을 허무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이 사업은 지역 평통사에서 일상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회원들의 지속적인 평통사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소성리 사드기지 현재 상황

대구 평통사는 지역 내 주요 기지인 '성주 사드기지'와 '왜관 캠프캐롤'을 중심으로 감시, 추적, 대응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사드는 2017년, 현재의 성주 소성리 사드기지에 반입 배치되었습니다. 미국은 사드 한국배치를 시작으로 미국 본토와 지역 내 미군 전력을 방어하기 위해 한미일 통합 MD 체계를 구축하고, 한미일 통합 MD 체계 구축을 통해 한미일 군사동맹을 견인하여 자신들의 지역 패권 유지 강화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지역 패권을 위협하는 중국의 부상과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 미국은 대중국 봉쇄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사드 레이더를 한국에 배치하여 한국을 대중국 미사일 위협에 대한 조기경보 기지, 대중국 작전의 전초기지로 전략시켰습니다.

현재 성주 사드기지에는 레이더(AN/TPY2), 미사일 발사대 6기, 지휘통제장비, 냉각장비, 통신장비 등으로 구성된 1개 포대로 주한미군 35방공포여단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드를 운용하는 주한미군 35방공포여단 소속 부대는 왜관 캠프캐롤에 본부를 두고, 사드가 배치된 성주 사드기지(소성리 소재) 운용 병력을 매주 화요일, 헬기를 이용해 교대하고 있습니다.



사드 발사대 모습 (왼쪽 위) 사드기지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대구 평통사 회원(오른쪽 위) 사드 포대 현황(아래)

이것은 미군과 관련된 어떠한 물자나 인원의 출입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주민들의 결의가 사드 기지로 향하는 유일한 육로를 막아낸 성과로 현재까지도 사드 운용을 위한 유류와 미군 병력, 미군 관련 모든 물자가 헬기로 수송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불법적인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군 경계부대의 편의시설 공사라며 주민을 속이고 실제로는 미군시설 공사가 이루어져 주민들이 5개월간이나 저지 투쟁에 나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군은 또다시 한국군 경계부대 편의시설 개선을 핑계로 공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미국은

그동안 방위비분담금까지 전용하여 불법적으로 기지 내 미군시설 공사를 진행해왔고, 방위비 분담금을 활용한 대규모 미군시설 공사마저 계획되어 있다는 사실이 최근 미 의회에 제출된 '2021년 미 국방예산(안) 미 육군 예산설명서(국방예산안 부속문서)'를 통해 밝혀져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적인 사실들이 밝혀진 것에 아랑곳없이 한미 당국은 불법을 포기하지 않고, 기지 내 공사 강행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사드 이동, 추가배치 감시 대응

최근 미국은 주한미군 연합긴급작전요구를 통해 사드의 이동, 추가 배치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연합긴급작전요구에 따르면 현재 유선으로 연결해 운용중인 사드의 레이더와 발사대를 무선 원격으로 운용하여 배치 범위를 확장시키고, 이를 위해 성주 기지에 배치된 레이더나 발사대를 타 지역으로 이동 배치하거나 새로운 발사대를 타 지역에 추가 배치 또는 새로운 사드 포대의 추가 배치까지 예상됩니다.

이러한 이동, 추가배치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부지를 또다시 미군에 공여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는 것은 물론, 주한미군 연합긴급작전요구의 완성으로 한국 MD의 미국 MD 편입과 군사적 종속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예상되는 이러한 시도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성주 사드기지'와 '왜관 캠프캐롤'에 대한 완벽한 감시와 세밀한 대응 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구 평통사는 성주 사드기지의 불법 공사 강행을 저지하고, 사드의 이동과 추가배치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는 것은 물론 이미 배치 운용되고 있는 사드를 철거시키기 위해 기지감시와 대응 활동을 공세적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

대구 평통사는 운영위원과 열성회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성주, 김천 주민들을 결합해 사드를 비롯한 MD 학습을 진행하여 사드철거와 한미일 MD 구축 반대의 이론적 바탕을 다지고, 이를 기반으로 활동 지역 내 위치하고 있는 '성주 사드기지', '왜관 캠프캐롤'에 대한 지속적인 기지 감시활동과 언론 모니터링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적된 감시 정보와 모니터링 내용을 기반으로 수시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신



사드 부지 정문 앞 평화행동, 봄날 벚꽃이 피었다.

속한 현장 대응을 실행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여론 확산에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대구 평통사는 관련 기사를 선별하고 분석하는 ‘언론감시팀’, 기지 내 감시 활동을 하는 ‘현장 감시팀’, 정보를 취합하고 공유하는 ‘정보관리팀’, 현장 대응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현장대응팀’으로 구성된 팀 체계를 통해 각 팀이 맡은 역할을 수행하고 공유하는 자발적 활동을 끌어낼 것이며 주 1회 점검을 통해 팀별 활동을 평가하고, 주간 계획을 세워 실천할 것입니다.

대구 평통사는 활발한 ‘기지 감시와 대응 활동’을 전개해 새로운 지역 활동의 전형을 마련하고, 이 땅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한 우리 평통사의 막중한 역할을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는 각오로 이 사업에 매진하겠습니다. 

♥ 광주평통사

광주평통사 11차 총회



4월 19일(일) 광주평통사 11차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아쉽지만 대표, 감사, 운영위원, 지도위원을 중심으로 32명의 회원이 모여 진행했습니다.

먼저 개회에 앞서, 광주평통사 회원으로 이번 총선에 출마해서 당선이 된 이용빈(더민주당 광주 광산갑), 강은미(정의당 비례) 두 분과 출마했다가 낙선한 유종천(정의당 광주 서구을) 회원의 그간의 소회와 함께 평통사 회원으로서 국회에서의 활동과 다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처음으로 수여하는 모범 회원상인 '박종섭 평화통일상'은 노승연 청년이 수상하였습니다. 노승연 청년은 광주평통사 청년회원으로서 평통사 청년 네트워크 활동, 원폭피해자 구술채록사업과 각종 실천에 헌신하고 노력한 열정을 높이 평가하여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대학 진학으로 광주를 떠나 서울 청년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더욱 활발한 청년활동을 기대합니다.

2019년 사업평가(안)와 결산(안), 2020년 사업평가(안)와 결산(안)은 프리젠테이션과 문서로 발제하고 참가자들의 박수로 통과하였습니다.

〈2020년에도 원폭 75년, 한국전쟁 70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의 한 길에 새 평화세력 모아내자!〉는 구호아래 더 왕성하게 활동하는 광주평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동석 |

♥ 나주평통사

나주평통사 4월 공부모임



4월 20일(월) 나주평통사 정기 공부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공부는 <사드의 이동·추가 배치에 위험·위법>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최근에 진행한 내용이 어려웠는지 재차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미사일 방위에 한국이 본격적으로 편입된다는 사실에 대한 우려와 사드 이동, 추가 배치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닌 이미 실행중인 사실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나주평통사 총회 일정과 방식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총회는 오는 5월 18일(월) 이레교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해나갈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 이현영 |

♥ 군산평통사

하제마을 일대 미군기지 공여계획 철회 촉구 기자회견



군산 하제마을 주민들과 군산평통사 및 시민단체들은 4월 2일 군산시청 앞에서 '국방부의 하제마을 일대 미군기지 공여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방부가 20여년에 걸쳐 주민들의 삶을 파괴하면서 탄약고의 안전거리를 확보한다는 미명하에 빼앗은 땅을 미군에게 공짜로 준다면 배타적사용권이 인정되어 군산시와 시민들은 아무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혈세로 농민들의 땅을 헐값에 빼앗아 미군에게 주는 파렴치한 행위는 평화군축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군산 미군기지 월례집회
그레이이글-ER 추가 배치철회 촉구



4월 15일 군산 미군기지 앞에서 열린 월례집회에서 이재호 운영위원이 올해 9월 무인공격기 그레이이글-ER 6대를 추가로 배치하려는 주한미군의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철회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레이이글-ER이 군산미군기지에 배치된다면 군산은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로서 성격이 더욱 강화되고 이는 한반도 평화에 중대한 장애가 됩니다.

| 최소영 |

♥ 보령평통사

보령 3차 정기총회



4월 22일에 보령평통사 제3차 총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전체회원을 대상으로는 온라인 안전동의를 진행하여 28명이 동의해 주었습니다. 확대운영위원 9명이 농민회관 3층에서 온라인 안전승인 결과 보고와 약식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보령 총회에 참석한 김강연 사무처장은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관철하기 위해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무급휴직을 강행하는 것의 불법부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 과정에서 평통사의 활약상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한미동맹 허물기를 위한 지역 특화사업으로 보령 근처인 안흥 미사일발사시험장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실전을 제안했습니다.

이날 김진수 목사의 후임으로 부임한 홍순오 목사가 처음 참석해서 회원가입과 함께 운영위원을 결의해 주었습니다.

| 권진복 |

♥ 부천평통사

제철음식 모임



꽃 피는 봄이면 도시락 싸 들고 뒷동산에 소풍이라도 가야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요즘, 단촐하게 제철음식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반가운 회원가입 소식을 전합니다. 제철음식 모임 화이팅!!

2020총회는 운영위원회로 갈음



두 차례나 정기총회 날짜를 조정해가며 어떻게든 회원들과 총회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계속 연장되면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 운영위원 총회로 갈음하고 차기 총회에서 인준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총회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은 시간들입니다. 무엇보다 건강 잘 챙기시고 반가운 마음으로 얼굴 볼 날 기다려봅니다. 몸은 멀어도 평화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SNS 활동으로 평화통일의 hull씨를 널리 퍼트려 봅시다!!

| 주정숙 |

♥ 순천평통사

순천 평통사 총회



코로나19로 인해 순천평통사 총회가 3월 27일, 28일 양일간 온라인 총회로 대체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재적인원 112명중 64명이 참석하여 총회가 성사되었으며, 감사보고서 채택, 2019년 결산 및 사업평가, 2020년 예산 및 사업계획, 신임 사무국장 인선에 관한 건에 대해 전원 찬성으로 통과 되었습니다. 김경수 회원이 신임 사무국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무국장으로 수고해 주신 김용재 회원께 감사드립니다.

4월 평화행동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4월 평화행동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7시까지 연향동 국민은행 앞에서 변함없이 진행하였습니다. 방위비분담금 주지말자! 불법 사드 철거! 피켓을 들고 평화행동을 진행했습니다.

| 김경수 |

♥ 부산평통사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철회 1인시위



3/31(화) 오전 11시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방위비분담금 40~50억 달러 강압,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강행 기자회견' 시간에 맞춰서 부산에서는 손기종 사무국장과 회원들이 8부대(주한미군 837수송대대)와 백운포(주한미해군사령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고베 평화발자국 후속 - 일어공부모임, 기지대응모임



고베 평화발자국을 다녀온 후, 일본 단체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부산 미군기지 대응활동을 위한 기지대응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어는 매주 일요일마다 모여 공부합니다. 기지대응모임은 각자 분담한 기사검색 내용을 학습하고 필요한 실천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해군 관련 무기들도 학습할 예정입니다. 이 활동은 올해 평통사의 역점 사업인 지역별 특화사업의 일환입니다.

회지모임 리더교육

4/4(토) 오후 7시, 회지모임을 이끌어갈 리더들을 위한 학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모임의 주제는 '사드 전면, 이동, 추가배치의 의도와 문제점' 이라는 주제로 소성리상황실 김영재팀장이 강의하였습니다. 이날 학습 내용을 기반으로 4월부터 재개되는 회지모임에서 '사드 이동·추가 배치 및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부지 공사 비로의 전용 관련 청와대 질의서' 내용을 읽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모임은 5월 3일 일요일 오후 6시입니다.

회지읽기모임 재개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회지읽기모임이 재개되었습니다. 4/12(일)에는 감리교회관에서 동래, 연제구에 사는 회원들이 모여 회지읽기모임 <평화누리>를 시작했습니다. 회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취지에 부응하여 마스크 착용 등 감염 방지 위생 원칙을 지키면서 모임을 하게 됩니다.

회원확대 결의!

4월 운영위원회에서는 코로나 여파로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회원확대를 위해 힘을 내기로 하고 각자 회원이 되실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각 운영위원 별로 회원연락망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관계맺기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 유수진 |

♥ 서울평통사

서울평통사 18차 정기총회



4월 3일(금) 오후 7시,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정기총회는 온라인 서면 약식 총회로 진행했습니다. 서울평통사 성원 383명 중, 온라인 사전 안건 승인은 127명이 했고, 87명이 위임을 하여 214명의 찬성으로 안건 승인되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온라인 서면 약식 총회는 당일, 유튜브 링크로 생중계 하여 100여 분이 시청하였습니다.

노동분회



노동분회 모임은 월 1회,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 모임은 17일(금), 오후 7시에, 지난 번 회지에 실린 사드 추가배치 반대 청와대 질의서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사드 추가, 이동, 전면 배치에 따른 부지공여 등의 문제가 당면한 현실로 제기되는 문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차기 모임은 5월 15일(금)입니다.

서울 청년모임



서울 청년모임을 온라인으로 매주 금요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핸드폰이나 컴퓨터 화상으로 모임을 하는 게 다소 어려웠지만, 대표를 중심으로 모두 다섯 명의 운영팀을 꾸려 사전 준비회의도 하고, 노력을 기울이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4월 17일(금) 온라인 모임 때는 사드의 문제점을 다룬 영상을 보고 퀴즈를 풀며 함께 공부했습니다.

허명석 회원 결혼 축하드립니다~



3월 28일 허명석 회원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결혼식 하객이 적을까 걱정했는데, 우려와 달리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었고, 피로연까지 즐거운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 황윤미 |

♥ 인천평통사

18차 정기총회-온라인 약식총회로 진행



코로나 여파로 올해 총회는 온라인 약식총회로 진행하였습니다. 3월 27일, 사무실에서 김일회, 김성태 대표를 비롯해 9명의 회원들이 약식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사전에 온라인에서 121명의 회원들이 안전동의에 참여해 주셨고, 응원 메세지도 보내주셨습니다.

올해 인천평통사는 회원모임 확대, 지역특화 사업으로 서해평화를 위해 NLL문제와 서북도서사령부에 대한 조사와 대응활동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핵무기금지조약 가입촉구 서명운동을 천주교 성당과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벌이기로 했습니다. 평화사랑방(매월 첫째주 화요일), 7.27평화협정 한마당 행사에 회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올해 '500명 회원 시대'를 열기로 했습니다. 10명 이상의 회원들로 평화행동 실천팀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한국전쟁 70년이 되는 올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실현에 힘을 모아내자고 결의 했습니다.



2019년 왕성한 실천활동을 한 이옥재 회원에게 열정상을, 10명의 신입회원을 확대한 김지수 회원에게 담쟁이상을 수여했습니다. 이옥재 회원은 실천왕답게 핵무기금지조약 가입촉구 서명을 받아 오셨습니다.

처음 진행해 본 온라인 서면 약식총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수제 마스크를 보내주신 허필자회원님, 마스크 필터와 다과를 준비해 주신 박점숙회원님, 장뇌삼을 주신 이옥재회원님 고맙습니다.

회원들이 만들어가는 뜻깊은 실천 ~ 평화행동 실천팀에 함께 해주세요!!



불법 부당한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하라는 강압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를 관철 하기 위해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을 불법적으로 강행한 미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김성태, 서경혜 운영위원을 비롯한 회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올해 김성태 대표를 중심으로 평화행동 실천팀이 꾸려졌습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가 문의 : 김성태 대표 (010-4664-1696)

| 유정섭 |

♥ 목포, 해남, 무안

26차 운영위원총회 지역별 총회위원모임



평통사 26차 운영위원 총회 지역별 총회위원 모임을 3월 16일(월) 나주평통사(11명 참석), 3월 17일(화) 광주평통사(26명 참석), 3월 18일(수) 순천평통사(14명 참석), 3월 19일(목) 무안(4명 참석), 목포평통사(9명 참석), 3월 20일(금) 해남평통사(10명 참석)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나주 총회위원 모임에서 김병균 공동대표는 "핵무기 금지조약 가입 서명운동의 경우 핵무기의 반인륜성, 미국의 만행 등을 연계해서 잘 결합해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해 주었습니다. 광주에서 박종주 지도위원은 "총회 내용을 보니 평통사 모든 활동가와 회원들이 열심히 활동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격려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강은미 회원은 "평통사가 1년동안 고생했다. 평화통일과 관련 평통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평통사를 잘 확대되면 평화통일을 앞당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순천 총회위원 모임에서는 2020년 순천평통사 총회 준비와 관련 의견을 나누었고, 그자리에서 김경수 회원이 신임 사무국장으로 추천되고 결의를 밝히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목포 총회위원 모임에 참여하신 김기중 전교조 전남지부장은 "회원들이 한가지 사업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예로 각 지역별로 핵무기금지조약 서명운동 담당자를 선정하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실천과 조직을 공동모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핵무기금지조약 서명운동을 통해 대중적 폭을 넓히고 그 속에서 적극적으로 회원을 조직하자", "평통사가 진영, 정파의 논리가 아닌 민족과 민중을 위해 자주와 평화통일을 위한 길에 헌신적으로 고민하고 공부하고 실천하는 모습이 너무 좋다. 평통사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결의의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3월 16일 나주에서부터 20일 해남까지 평통사 26차 운영위원총회 지역별 총회위원 모임을 통해 회원들의 총의를 모아내고 실천을 매개로 회원확대와 새 평화세력 찾기, 실천·조직 역량 강화를 통해 한미동맹을 허물고 반드시 평화변영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한 해가 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자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 정동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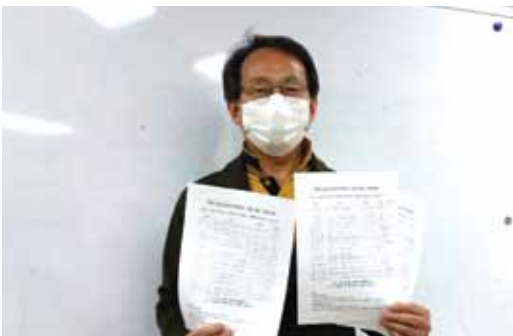
♥논산계룡모임

반갑습니다~
논산계룡평통사 준비모임



4월 21일 화요일 논산계룡준비모임 월례모임을 가졌습니다. 회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준비한 이도구 준비위원장의 뜨끈뜨끈하고 시원한 순대국밥 한 그릇씩을 맛나게 먹으며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박석분 조직위원의 평통사 현안 브리핑시간은 열띤 질문과 응답으로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무급 휴직 문제, 사드 이동, 전면 추가배치의 문제에 대해 잘 배웠습니다. 배움의 열기를 이어 실천을 위한 결의가 있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관련 '1인 시위와 작은 현수막(또는 스티커)을 차량에 붙이기'를 5월 모임 전까지 꼭 실천하자고 약속하였습니다.



준비위원장인 이도구 목사님이 핵무기금지조약 가입촉구 서명을 받아오셨습니다. 꾸준한 실천에 고맙습니다.

| 변혜숙 |

♥대구평통사

4.26 사드배치 3년,
불법사드 철거 촉구 성주읍 평화행동



4월 26일, 박근혜 적폐정권이 불법 사드를 기습적으로 배치한 지 3년이 되는 날입니다. 국민 뜻과 절차에 반하는 사드 기습배치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던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년간 주민들의 피맺힌 절규와 몸부림을 철저히 외면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임시배치라던 사드를 정식배치 하려는 움직임까지 있어,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질의와 면담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에 4월 26일 성주 소성리, 김천, 원불교와 사드철회 평화회의 소속 단체들이 성주읍내에서 20미터 '불법 사드 철거'를 촉구하는 1인시위와 사드기지 정문앞 평화행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대구평통사에서 김찬수 대표를 비롯한 회원들이 적극 참여했습니다.

소성리에 응원 현수막 보내



평통사 각지역에서 사드 철거 투쟁 현장을 지키고 있는 소성리 주민들을 응원하는 현수막을 보냈습니다.

| 김영재 |

회비와 후원금 (2020. 03)

평화와 통일을 여는 일에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중앙평통사

[임원 및 중앙회비] 강만길 강정주 고영대 권영선 권정호 김광진 김귀옥 김광열 김동우 김동환 김명래 김성열 김성환 김정수 김정욱 김태인 김형배 김홍수 노혜정 림규호 문규현 박상복 배종철 배현철 안진걸 안진걸 양동일 유영성 이규영 이상진 이상진 이상호 이숙주 이옥숙 이일영 이일영 이천우 이현숙 임종철 정경록 전시우 전윤미 정경준 조문자 조민희 조상수 조은숙 최만정(충남아산) 최혜성 형복순 홍영진 황병태황호영 KIMJUNGH [정기후원금] 강수해 김요환 박유순 이철호 들꽃향린 전주남문교회 향린교회 하늘평화공동체

광양평통사

강삼언 김 봉 김부필 김용선 김용주 박수환 박영실 배영일 서영환 신덕희 신유순 신정환 안성은 안정주 오종호 이금한 이영기 이인수 이상수 이정재 이종재 이희정 정인재 정일태 주경진 진덕미 천우주 최 열 황미경

광주평통사

강경식 강세웅 강수향 강은미 강정원 강지연 강준원 고영인 고익종 고재한 구기연 권경희 기원주 김가영 김경민 김광관 김광중 김가남 김가만 김기현 김달아 김덕용 김덕우 김동열 김동우 김동호 김문석 김미숙 김미영 김미진 김민선 김민정 김민호 김보향 김범중 김병문 김성철 김선미 김선호 김성룡 김수영 김수하 김순홍 김순식 김순원 김아영 김연배 김영석 김영식 김예지 김옥희 김용근 김용목 김용호 김유빈 김은규 김은정 김은지 김재중 김 정 김성식 김성식 김중식 김중필 김지호 김진수 김진환 김태환 김현정 김현주 김현진 김현태 김혜련 김혜선 김홍길 김화순 김효경 김혜용 김희정 나윤상 노진영 노해민 류만숙 류승환 명경관 문홍식 박광희 박기웅 박길원 박다현 박은성 박성진 박성희 박석우 박선이 박성수 박수희 박오열 박윤수 박일남 박영희 박정화 박준영 박지영 박태순 박현재 박형아 박효섭 박희환 배두광 배민혁 배아영 배진하 백규열 백지은 백희정 변하연 서경훈 서광진 서기웅 서부원 서일광 서준환 서진영 서현미 성창우 손민식 손수영 손규환 송기철 송미숙 송순교 송진국 송진철 송진환 신경구 신경희 신영훈 안 민 안 석 안영숙 안홍철 양 동 양민철 양성수 양승집 양연우 양혜은 양해주 안진우 오공희 오홍록 오승봉 오정아 오창규 오웅관 위유민 위현복 유시훈 유준영 유충현 윤도영 윤봉관 윤상호 윤유식 윤지숙 윤정자 윤태원 윤현식 윤형현 이간규 이경진 이광철 이교창 이귀일 이금호 이기문 이기현 이기철 이기호 이다혜 이매실 이미숙 이민영 이병식 이석우 이성계 이수경 이순호 이영선 이영주 이영현 이윤대 이윤빈 이윤주 이윤하 이우원 이윤정 이은수 이정옥 이지하 이진덕 이철우 이태욱 이현수 이현우 이호동 이종규 임광식 임대영 임미하 임수선 임세미 임정식 장관길 장덕자 장동수 장성훈 장재만 장 요 장유리 전경일 전 정 전택상 정경화 정규영 정길주 정성민 정동식 정복호 정보현 정세원 정수진 정순일 정시영 정시영 정영모 정유리 정종득 정찬명 정찬호 정천성 정현우 정형남 조규성 조명균 조선호 조성식 조용근 조용성 조현도 조효숙 주경미 진동하 차승세 천재현 최경미 최경환 최기호 최승주 최동환 최명숙 최봉진 최선동 최영호 최영호 최윤덕 최정현 최치현 표경식 표영민 홍광표 홍기원 홍상대 홍영애 홍요한 홍인회 황관택 황장근 한미음장예인자립생활센터

군산평통사

강일숙 고광석 고동식 권태균 권현숙 김경수 김국태 김남기 김봉옥 김상덕 김성영 김성곤 김성수 김성훈 김수진 김소수 김정호 김 진 김진환 김태철 김형국 나기환 나신환 남대진 노승민 문성국 문성주 문순일 문지영 박금자 박옥현 박운옥 박현동 배형원 서대석 서동환 선진숙 송래은 송상구 신동수 신수철 양기만 양은희 오규수 오선환 오주영 옥경남 위양자 유미숙 유승기 유연택 이계택 이명렬 이명로 이봉호 이선희 이애란 이옥선 이재호 이중인 이지윤 이천우 이천호 이현주 이현철 이희정 임은숙 임은애 임정원 임준희 임충원 정미애 장재순 전화남 정 민 정성빈 정옥진 정지숙 조경수 조규준 조상진 조수현 조영환 조용주 조인호 조판철 주호균(문규옥) 진인하 채영호 최강문 최경자 최승환 최은주 최은진 최이화 최재석 최진영 한정숙 한기식 황 진

김제평통사

권태정 권대정 김미라 김미라 김상봉 김성순 김승환 김범미 김명주 김익현 김진원 김진호 김창수 김창화 김형기 김형에 김형택 나인근 나현균 남궁윤 노경두 노규식 박기주 박영배 박원용 백창민 소광석 손은하 신동우 안진성 오인근 유재룡 이영용 이연구 이윤만 이은경 이현숙 이희곤 전미영 정형국 정호영 최종일 하성애 황혜정

나주평통사

강현옥 김경호 김병곤 김성보 김영민 김요섭 박선재 박성태 박정현 박철순 소 영 안보환 안희만 양이화 양한열 이득택 이 연 이윤범 이재창 이재휘 이정훈 이현영 장순영 장재영 정만식 정소영 정윤자 정희만 조성환 최기춘 최진연 홍기숙

대구평통사

강기룡 강현옥 고경수 고희림 박영은 구연우 구자숙 권순덕 권오혁 권재호 권준영 김경호 김경희 김기욱 김기웅 김대성 김덕기 김도은 김명환 김미란 김미정 김성길 김성희 김성국 김성대 김수경 김승무 김영숙 김영숙2 김영은 김은주 김범미 김정수 김중희 김지남 김찬수 김호훈 김효남 나미숙 노영옥

노의학 문광덕 문혜경 박배일 박소영 박순단 박영하 박영희 박재범 박주현 박진상 박철주 박태정 박형선 배소라 배인연 백미연 서보성 설동현 손만철 손영준 송철환 신복실 신영도 신호철 안준연 안현수 양은숙 양정희 양호임 오창섭 오현희 오해란 우정순 유은정 유은정2 유재복 유지수 유창철 윤화일 은영지 이근우 이기락 이기분 이기자 이동수 이미경 이병수 이상규 이상숙 이석문 이석주 이영훈 이윤우 이우용 이은수 이인옥 이재호 이정연 이종균 이종훈 이종희 이준원 이종식 이진원 이창주 이태광 이희일 임정균 임현정 장성대 장재호 장재호2 장정자 전창훈 전호관 전희영 정영숙 정만규 정수경 정수영 정수대 정용성 정종덕 정훈호 조규천 조유련 조현정 주경복 차상혁 천영희 최봉태 최석인 최진영 최춘식 최현정 하재철 한기영 함수근 허정호 허재남 홍상욱 황병윤 황철식

목포평통사

강성취 강 신 강원구 강현석 고정석 권혜경 김경희 김관일 김금숙 김기중 김나리 김동규 김무영 김민지 김명철 김예리 김영철 김재홍 김홍수 김중석 김지희 김창현 김해동 김현아 김현우 김현진 김호영 김중석 류경수 마상진 문성훈 문화정 박기철 박미숙 박성준 박서진 박 웅 박종찬 박진경 박용성 백동규 변철진 서만철 손낙수 손민원 손지은 송원철 송철호 신재범 신환호 안광미 양현주 여인두 영경숙 오승주 유지용 유영준 윤성철 윤소하 윤영성 이경수 이경훈 이구인 이미정 이보라미 이선재 이윤이 이종환 이종희 이지용 이현숙 임동훈 임원택 장금희 장미경 장세원 정석기 정성수 정성창 정영록 정우담 정지범 정찬길 조기형 조상현 조영규 조창익 최경민 최경식 최기중 최승국 최은기 최진호 최철원 최 훈 한미경

보령평통사

고미숙 권기석 권승현 권진복 김기중 김양자 김영석 김은수 김경주 김종성 김진수 남미자 류남신 백은영 상형규 서순희 송미영 신현영 안학수 오무광 오경우 우상식 유성준 이덕보 이상석 이영준 이윤우 이재문 이정근 이정학 이종철 이종협 이학원 정수정 최병성 추동진 한광수 황대연

부산평통사

강문성 강세나 강정아 강정아 강한돌 강노현 공소연 광광덕 광상진 권수진 권순환 권 일 권정미 권정아 권창훈 김강일 김건우 김경성 김경태 김광수 김규연 김기래 김나영 김남희 김덕자 김문근 김미경 김봉현 김성수 김수길 김여원 김연이 김영미 김영환 김영환 김용환 김용환 김 옥 김유중 김윤자 김은영 김은자 김은주 김은주 김재연 김재홍 김종이 김주희 김지영 김지은 김태훈 김하원 김해별엘교회 김혜영 김현복 김현호 김형관 김형균 김현수 남송우 남원철 남정희 남태호 노정현 도라지 문배수 문상환 문은경 박경서 박다은 박봉규 박석문 박성호 박승일 박순자 박순찬 박순호 박양준 박정하 박종권 변재호 서금성 서미숙 서유선 서준범 서진화 설정희 설기석 상은하 손기종 송정아 신경희 신석균 신수정 신승태 신양범 신연아 신차범 신한규 심창진 안영희 안승업 안종득 양윤정 양은희 양원호 양귀원 엄병종 여영국 오영환 오종석 온배움터 우수경 원우원 원형은 유재규 유종희 윤경환 윤종곤 윤종렬 윤혜정 이강식 이기성 이덕순 이상남 이상익 이상창 이상철 이순일 이영림 이우영 이우선 이우선 이의옥 이의진 이점식 이종영 이진호 이창환 이태재 이학진 이혜선 이화진 임상민 장유달 장호봉 전다미 정쌍은 정영선 정영은 정원옥 정임철 정혜경 정광호 조보고파 조원태 진승호 차성호 차정진 채희만 최무덕 최병학 최 진 하경숙 하지림 한석문 한소영 허남돌 허재봉 황구하 황도윤 황성은 황용재 황희경

부천평통사

강성진 강용환 구광숙 구자춘 구현모 권한관 권혁만 권희진 김경남 김덕근 김덕희 김동오 김미영 김석환 김성용 김성호 김수철 김숙희 김숙희2 김애연 김용란 김용상 김정은 김정훈 김주영 김지숙 김현경 김현주 김혜하 노은하 노형욱 류진남 문종열 민경선 박경원 박석민 박숙진 박숙경 배영미 서순복 서해수 석의정 설정숙 성명은 손무수 손종욱 송기부 신용철 심영성 오용균 유승우 유용환 윤점미 이도영 이성우 이숙자 이영아 이은영 이종우 이준환 이진희 이현구 이현주 이혜연 임숙영 임종영 장재영 정근수 정우희 정선화 정승옥 정용진 정윤희 정인주 정현희 정복희 조기대 조숙희 주영숙 주영일 주영자 주정숙 지상철 지태복 차성호 천하철 최성희 최정규 최희준 허민영 현지환 홍봉현 황영선 황영희 황준현 황홍순

서울평통사

강대곤 강대준 강보현(2개월) 강수해 강양원 강영록 강우균 강윤미 강효석(2개월) 강영준 고광호 고영우 고연주 공동길 광노현 광원호 구수경 구자숙 권순걸 권순현 권영무 권옥 권장희 권제세 권지숙 권현은 권혜인 김각영(1년) 김경자 김경자 김경호 김경훈 김군열 김기수 김기수 김기원 김대성 김동훈 김명선 김명일 김미경 김미령(2개월) 김미영 김상훈 김새론 김석근 김선희 김선희(2개월) 김성훈 김수목 김수신 김안수 김영균 김영모 김영순 김영애 김영은 김영재 김영진 김영철 김영철 김윤성 김원복 김유성 김유하 김은미 김은아 김익환 김인아 김일수 김재훈 김정미(2개월) 김정원 김정자 김정현 김종일 김중환 김지수 김진 김진근 김진환 김중록 김대준 김한성 김해성 김해인 김항자 김현애 김현진 김화순 김효식 김희국 김희현 나승길(1년) 나향(반양진) 나현대 나혜원(2개월) 남미영 남택우 도임방주(2개월) 류미아 류은수 류효진 류희숙 림규호 문병모 문수철 문인국 문희경 민성호 민 영 민영미 박경혜 박민정 박봉희 박상호 박연미 박은봉 박은주 박종기 박종양

박종인 박진옥 박진희 박하영 박해철 박해정 박혜진 박후임 박희성 방만식
(2개월) 배기봉 배진 배준식 변연식 변연희 서보혁 서영미 서영진 서유미
서인규 서정례 서진희 서창석 서창호 신소진 신순단 손영일 손우정 손유호
손정목 송금식 송민영 송상환 신동욱 신영철 신재현 신필준 신해록
심소연 안건보 안병순 안희록 양계택 양금순 양덕춘 양민석 양순주 양원철
어익선 임계희 여혜숙 연선진 염윤희 오기성 오낙영 오덕순 오미정 오지연
오재길 오혜경 우문명(2개월) 원운호 유나리 유영철 유정에 유중식 유현주
유형걸 윤근식 윤동현 윤성진(2개월) 윤수애 윤영수 윤영일 윤영진 윤은선
윤정원 윤호성 이경목 이경아 이경옥 이경희 이광숙 이광중 이기묘
이기영 이기자 이동주 이두우 이봉국 이상기(이경은) 이상미 이상엽 이상재
이선록 이선재 이성환 이수정 이형수 이수철 이순희 이숙무 이아름 이애용
이영목 이영주 이윤 아윤영 이재갑(2개월) 이재필 이정숙 이정숙 이정화
이혜진 박승걸 이화정 임동원 임보라 임선화 임수아 임순례 임인식 임정현
임진영 임태환 임효일 장경도 장기준 장남희 전기호 전영란 전은규 정광진
정김경숙 정상현 정상임 정소연 정수애 정수원 정연선 정영훈 정원진 정은선
정준영 정호천 이재성 조순규 조영희 조은화 조창현 조화순 주혜련 진유선
차정운 채근식 채운석 최대욱 최문석 최정원 최성술 최석희 최성민 최승준
최승훈 최아람 최원 최충열 최형석 최현민 한문덕 한상기 한성호 한석희
한영욱 한중현 한현실 허성식 현동식 홍기정 홍영의 홍정희
홍창의(김명화) 홍희덕 황금석 황덕호 황순하 황 완 황윤미 황철우

순천평통사

고성식 공훈표 김귀진 김대성 김동구 김동수 김병태 김 석 김영근 김용재
김태대 김유숙 김이준 김인철 김경호 김중순 김중안 김준희 김하성
김현주 김효숙 류보은 문명태 문영훈 문재경 문형철 박광남 박귀주 박미옥
박민근 박병석 박상록 박선택 박성훈 박옥희 박정훈 박종삼 박종목
박종태 박종택 박찬형 박필수 배경성 배진택 배선익 손소상 손훈모 송담숙
송이경 송형일(박대기) 신근홍 신원식 신원희 신상삼 안병일 양순규 양성영
오옥목 오정훈 오대환 오대훈 오지현 우현우 유복상 유옥상 유진이
윤성근 윤종환 이겨라 이귀영 이규학 이기호 이민재 이성대 이애란 이옥자
이종술 이춘식 이형민 임미정 장복숙 전성필 정길준 정상호 정양호 정영동
이종훈 이종현 이종철 이종숙 이종숙 이종숙 이종숙 이종숙 이종숙
최성진 최희진 한혜영 허규희 허남필

안동평통사

강석주 고정희 권영희 김대성 김대현 김동원 김두년 김명화 김세룡 김수동
김예숙 김옥희 김정희 김재권 김경석 김중철 김지섭 김재현 김재현 김판갑
김현태 김성배 류준우 류현정 민현주 박두식 박옥재 박재근 박광규 배용환
손현록 신성일 여상하 오미지 이병현 이성로 이우원 이 창 이병우
이해선 임극순 장세길 전경성 조석옥 조선아 조영준 차명숙 한철희 황지영

익산평통사

곽은경 김대성 김양용 김영재 김유선 김중화 김창수 김현숙 김희전 노영래
류일렬 민 찬 박두식 박영신 박영현 박옥봉 박은경 박지현 박진식
박해영 배병국 백낙진 서 용 송동환 신귀백 신항우 심경희 안영묵 안 준
안현석 오기주 유재동 유희택 이근주 이병식 이봉이(조원일) 이상문 이석근
이운신 이은경 이창우 이정철 이종민 이종구 이창진 이탁균 장종수
장정규 전미영 전호정 정수진 정운송 정운용 조가미 채미진 채운석 최미화
최미화 최민옥 최영이 최인경 최재철 최현남 최현우 홍지훈 황영하 황익성
황인철

인천평통사

강명진 강병수 강영구 고보선 고상혁 고영남 고준화 곽준경 구동훈 권세영
권소성 권창진 권혁호 김갑봉 김강원 김경민 김기성 김금옥 김기수 김기철
김도율 김동진 김두원 김명환 김명희 김미경 김민서 김민정 김병미 김병철
김보희 김봉은 김성기 김선경 김선미 김성금 김성만 김성식 김성태 김소희
김숙 김숙희 김승태 김시완 김영순 김용석 김우경 김윤석 김은숙 김은숙
김익균 김익숙 김익수 김인경 김일중 김일희 김재용 김정원 김정자 김정하
김종갑 김중록 김중운 김중운 김주수 김준태 김중찬 김중현 김지수 김지훈
김자진 김현식 김현숙 김현주 김현호 김형진 김형진 김해정 김효록
김희경 김희숙 남두현 남익현 문경근 문병호 문선희 문영준 문한나 박근철
박남수 박달수 박동범 박영목 박미정 박병선 박세현 박순길 박순이 박승주
박영민 박옥희 박옥희 박옥희 박옥순 박운주 박정숙 박정용 박종익 박 진
박창현 박창현 박창현 박승민 박은정 서계현 서달원 서덕용 서영선 서재훈
소병목 손선재 손재진 손정민 손정민 손현철 송경명 송석우 송석우 송재철
송정로 송환식 신광일 신나영 신원수 신윤례 신희철 심신아 심옥민 심이성
심자섭 안영원 안태근 양순옥 양승조 여영선 오미정 오우정 오중훈 오창근
오태호 오현환 오해영 유민선 원 웅 원종인 유근식 유성규 유은영 유정섭
유정희 유진섭 유한경 유한철 유현철 유성우 유성우 유영선 유현식 이병원
이기는 이덕래 이동현 이현철 이만재 이우영 이우영 이우영 이우영 이우영
이상훈 이상로 이상은 이세구 이수진 이숙희 이승현 이승희 이안기 이옥희
이우성 이우성 이우성 이우성 이우성 이우성 이우성 이우성 이우성 이우성
이정옥 이정화 이재학 이종민 이창근 이창우 이천지 이춘식 이하선 이혜민
이현구 이현숙 이현순 이형수 이혜경 이혜정 이화정 인수범 이강민 임경희
임동철 임민재 임병구 임경호 임지우 임호철 정광수 정귀숙 정동준 정동준
장세훈 장영애 전혁규 전경택 정명숙 정미자 정서진 정승호 정시호 정우성
조은숙 정형서 정희진 조영락 조영숙 조남순 조보규 조성태 조종수 조은숙
조인휘 조재호 주민식 주수남 주윤택 지성용 지현규 지현민 진재환 최리주
최병준 최복례 최서일 최순규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정호
최성길 최현호 최현호 최현호 최현호 최현호 최현호 최현호 최현호 최현호
한연숙 한영순 한재수 한정수 한현진 한홍준 허문예 허문예 홍 중 홍희기

황병태 황선하 황인철

전주평통사

강기현 강대권 고이석 고자원 곽동순 국 산 국윤호 권동훈 김민준 김성환
김여진 김영호 김은자 김재병 김경민 김주진 김진성 김충만 김태순 김효숙
나영숙 노재하 문아경 민혜경 박기순 박성일 박수배 방용순 백기룡 백해영
불형근 서경희 서광호 서민이 서 승 서은숙 소춘수 송기춘 송미영 송호영
신귀희 신선하 심병호 심 훈 양경자 양동훈 양희진 엄경희 오봉숙 원영재
유영진 육숙경 이기봉 이기환 이동백 이동주 이상민 이상열 이숙희 이연숙
이영환 이만규 이재호 이종희 이지는 이형구 임애림 임익근 장충철 전상호
전소자 전형석 정기동 정기철 정형용 조경희 조미숙 조정자 조성현 전호성
최금희 최명숙 최용기 최용기 최인규 최재훈 최정국 한금수 한금수 허만숙
황대성 황재현

해남평통사

강대희 강정자 강태양 강경옥 김미희 김민하 김병옥 김상영 김수경 김양수
강기현 강은근 김은숙 김정삼 나성근 노 란 문재식 문형귀 민경진 박병을
박석중 박승규 박영자 박은정 박종삼 박태대 배춘진 배종수 백형진 봉문수
서용석 안소희 안종기 안근재 안태성 안태성 오성택 오은숙
유영아 유문식 유상화 유영식 유영재 유준서 이무진 이병태 이상규 이만열
이윤영 이정화 이종관 이종재 임영호 임현식 정미호 정우규 정거섭 정경철
정이나 주단우 최신영 최영수 최은수 한강희

강원 지역 회원

김영남 김주목 민원식 이진식

대전충청 지역 회원

가명현 강기현 강대훈 강대훈 강동호 강희운 고광성 구분중 권현영 김경숙
김구원 김규원 김규태 김기현 김도석 김동철 김미숙 김미연 김복실 김삼미
김상중 김선미 김성기 김성희 김영순 김오경 김재길 김진영 김진옥 김태운
김태운 김하나 김홍업 김홍수(대전) 김홍수(아산) 나백주 남누리 노형래
류기형 모성진 문성호 문수진 문성로 민학기 박노찬 박노찬 박영민 박인철
박필규 백영기 변혜숙 서남철 서영희 서해배 성광진 손정희 손정희 송광선
송신근 송원준 송광은 신관록 신성원 신주희 신현정 심규상 심상무 심우근
심주호 안창호 안홍희 양은영 오대현 오수진 오완근 오용석 유관철 유단비
유성호 유숙희 유영민 유영재 유요열 유정환 유정현 유정철 유진범 유희삼
윤병민 윤성렬 윤여진 윤필희 윤효근 이간용 이광현 이도구 이득우 이병영
이병구 이세중 이수연 이숙주 이애지 이요한 이우근 이은미 이은영 이은정
이재옥 이종영 이주호 이진미 이창복 이창복 이철수 이철호 이춘자 이영준
임병연 장도정 장명진 장인백 장창성 전양배 전윤미 전혜련 정명진 정성현
정승길 정은선 정창석 정형영 정희태 조동훈 조홍성 조만영 조병현 조봉현
조부환 조성미 조영주 조재현 조재형 조주형 차인기 채승범 최만정 최영민
추교하 풍천교하 한기형 한상열 함필주 허연 홍지은 황영식 황의대

무안 지역 회원

강성욱 강경태 김기주 김덕현 김병기 김선발 김양수 김영호 김옥길 김철필
김태산 문영란 문유신 박상식 박치우 송봉식 윤동주 이도선 이태식 임재점
정상철 정영관 정중석 정찬록 채미라 최병상 최홍률 홍석주 홍용식

전남 지역 회원

강덕구 강복현 기숙희 김광식 김대환 김미숙 김선대 김슬기 김은희 김행채
김현진 김희식 김희태 나옥석 노병남 노형태 류춘식 박경옥 박경희 박광운
박동하 박용두 박창태 박진숙 박태현 서민호 서정대 송호철 오태형 유원삼
유현숙 유구현 이광수 이승현 정은정 조동근 채일순 최 석 최순옥 최은애
한영덕

제주 지역 회원

강호진 고관일 권형우 김성규 김중환 문무병 박한백 방은미 양윤호 오영애
오상진 오주연 정영주

평택경기 지역 회원

강경남 권승훈 권차량 김교련 김상용 김성환 김병호 김용표 김용환 김주성
김준기 김택목 도영호 박성철 박해정 서명선 신종원 연창철 엄형만 오영미
이가영 이경수 이수영 이창진 이은우 이진희 이혜준 정인규 조명식 차치아
류와라관 추영배 한동수 한민규 한상진 황명선 황명선

평화통일연구소

[이사회비] 강정규 김일희 김지영 노재필 박진석 신정길 이정학 이진우 임승계
이종철 정규영 조현정 최소영
[회원 및 후원회비] 강수혜 고희림 권기석 권순걸 권진복 권현영
김강원 김관일 김금옥 김대성 김대순 김미령 김미정 김성태 김숙희 김숙희
김시완 김영석 김영재 김영철 김영희 김유숙 김은주 김중우 김중우 김중희
김 현 김 현 김현미 김현숙 김보남 남궁찬 류승화 문규현 민정숙 박경수
박병을 박복희 박삼준 박상희 박성민 박성민 박성진 박희복 박운옥 박하영
박해철 변연희 서경혜 서종환 손범수 손윤희 손종숙 신재현 신재훈 신신아
심자섭 오미정 오중호 오혜란 유영재 유정섭 유한경 윤영일 이관규 이영옥
이지아 이미경 이미정 이석문 이선영 이성로 이양진 이양재 이우성 이우영
이재호 이정숙 이종환 이주은 이형수 이혜연 임연희 임주희 장남희 전예경
정근수 정동석 정동석 정수경 정승창 정영훈 정용진 정일태 정만환 정현희
조미향 조승현 주은형 주정숙 최병상 최윤준 하대준 한상기 한승동 한혜영
함수연 허영석 홍기원 황윤미

* 회비 납부 문의 : 각 지역 평통사 사무국과 중앙 사무처
회비 명단이 잘못 기재되거나 누락되었을 경우 알려주세요

중앙평통사

주 소 : 03751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길 27(충정로3가) 2층
연 락 처 : 02) 712-8443 spark946@hanmail.net
계좌번호 : 기업 057-084533-01-013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서울평통사

주 소 : 03751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길 27(충정로3가) 2층
연 락 처 : 02) 713-1992 seoul-spark@hanmail.net

부천평통사

주 소 : 14572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90번길 46 2층
연 락 처 : 032) 671-7179 bcspark0601@hanmail.net

인천평통사

주 소 : 22156 인천시 남구 주안동 608-5번지 201호
연 락 처 : 032) 428-2230 icspark523@hanmail.net

보령평통사

연 락 처 : 010-2292-7883 김영석

익산평통사

주 소 : 54542 전북 익산시 고봉로36길 9-2
연 락 처 : 063) 832-0018 king208208208@hanmail.net

군산평통사

주 소 : 54077 전북 군산시 백룡안4길 6
연 락 처 : 010-4470-6065 박운옥

전주평통사

주 소 : 54954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1길 46-8

광주평통사

주 소 : 61245 광주광역시 북구 중가로43길 광주YWCA 605호
연 락 처 : 010-5610-5230 정동석 kj-spark@hanmail.net

순천평통사

연 락 처 : 010-7933-1581 김경수

광양평통사

연 락 처 : 010-9315-1796 정일태

나주평통사

연 락 처 : 010-3602-1849 이정훈

목포평통사

주 소 : 58684 전남 목포시 신흥로83번길 5 3층
연 락 처 : 010-9260-4863 김종수

해남평통사

연 락 처 : 010-5612-8125 박승규

안동평통사

연 락 처 : 010-9867-1599 배용환

대구평통사

주 소 : 41919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14길 59
연 락 처 : 053) 428-0727 dgspark@hanmail.net

부산평통사

주 소 : 47342 부산광역시 진구 신암로 177번길 2
연 락 처 : 051) 635-0964 bsspark@hanmail.net

성남용인평통사(준)

연 락 처 : 010-2462-1377 서덕석

김제평통사(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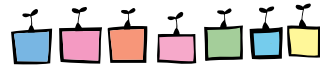
주 소 : 김제시 요촌동 서해화인빌 2동 702호
연 락 처 : 010-9957-7478 손은하

대전충청모임

주 소 : 34623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867번길 52 805호
연 락 처 : 010-3297-0568 유영재

무안모임

연 락 처 : 010-3645-2722 문영란



상임대표 문규현 **공동대표** 고영대 김병균 문홍주 박상희 변연식 이일영 이천우 임종철

감 사 박유순 안병순 **지도위원** 강정구 김순정 김영훈 명진 박순희 배종열 조주형 정혜열

자문번호사 권정호 김소리 김형태 남성욱 박주민 이남진 이덕우 장경옥

발행일 2020년 4월 27일 **발행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발행인** 문규현

주 소 03751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길 27 (충정로3가) 2층 **전 화** (02)711-7292, (02)712-8443

홈페이지 www.peaceone.org **전자우편** spark946@hanmail.net **후원계좌** 기업 057-084533-01-013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록번호 서울라 10482 **간 별** 월간 **등록일자** 2003년 10월 9일

핵무기금지조약(TPNW)

가입 촉구 국제 서명

당신의 서명이 한반도 비핵화와 핵 없는 세계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핵무기금지조약(TPNW)'이란?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2017년 7월 7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핵무기금지조약은 핵무기의 사용과 사용위협 등 핵무기를 전면적으로 불법화한 사상 최초의 국제조약입니다. 핵무기금지조약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50개국이 비준해야 합니다. 현재 (2020년1월1일) 총 34개국이 비준하였습니다.